

‘보수 본색’ 美대법, 바이든 대표 정책 학자금 대출 제동

낙태권 폐지에 성소수자 인권 제약까지...정치적 논란 야기 민주당도 정치 편향 비판...중신직 대법관제도 문제 제기도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이번주 보수적인 판결을 무더기로 내놓으며 익숙한 형태로 회기를 끝마쳤다”며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권한 없음’ 판단을 내리며 보수 드라이브의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미 이번 판결로 제약이 상당한 만큼 이전과 같은 즉각적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리

원성을 산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 성소수자 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서 매일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들끓었던 대법원 개혁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 “견강하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당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장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이번 판결에 앞서 MSNBC에 출연, “대법관에게도 입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인준을 통과하면 주기적 선출이나 윤리 심사 없이 종신직을 유지하는 대법관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도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정치 편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무소속으로 상원에서 민주당과 코커스를 함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공공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그들은 대법원을 그만두고 공직에 출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국가에 자신들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전통적 취약 지지층을 환충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관련해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자체가 보수 우위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경찰 총격에 10대 소년이 숨진 후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규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일(현지시간) 밤사이 7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총 3000명이 넘는다. 전날 파리에서 달아나는 시위대를 쫓는 경찰 모습. /연합뉴스

폭동으로 번진 프랑스 ‘10대 사망 규탄’ 시위

숨진 소년 할머니, 시위 중단 촉구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진 사건 후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5일째 이어지면서 밤사이 700여명이 체포됐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가 격렬한 지역에 특수 부대까지 투입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시위는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스위스 로잔, 벨기에 등 주변국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프랑스 정부는 밤사이 719명이 체포됐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전날의 1300여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총 3000명이 넘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경찰 45명이 다쳤으며 차량

577대, 건물 74채 등이 불에 탔다고 말했다.

파리 남부 도시 라이레로즈에선 오전 1시 30분께 시장 집에 차가 돌진하고 불이 나면서 대피하던 부인은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 한 명도 다쳤다.

보수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뱅상 장브뤼엔 라이레 로즈 시장은 성명에서 “집에 불을 내서 위층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을 죽이려다가 차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

북부 도시 릴에선 보건소가 불타서 완전히 파괴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시위대 부상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AP통신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50대 남성이 유탄을 맞고 숨졌다고 전했다.

전국에 배치된 경찰은 4만5000여명으로 전날과 비슷했으며 관광객이 많은 파리와 교외 등에

7000명이 집중됐다.

총돌이 가장 격렬했던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에선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하고 50여명을 체포했다.

전날 저녁 마르세유에는 헌병 대테러 특수부대 ‘지젠’(GIGN)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도착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마르세유 등에선 밤에 통행금지령도 내려졌다.

경찰에 살해돼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된 알제리계 10대 나일 군의 유족은 시위대에 진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일 군의 할머니 나디아 씨는 이날 프랑스 BFM TV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일을 핑계 삼고 있으며 우리는 사태가 진정되지 바라다”며 “손자는 죽었고 딸은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후폭풍...OIC 긴급회의

이슬람권 “공동행동 나설 것”

57개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가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쿠란) 소각 시위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결프 지역 일간 아랍뉴스는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쿠란 소각 시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OIC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쿠란을 모독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의 단결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히세인 브라힘 타하 OIC 사무총장은 “쿠란에 대한 모독 행위는 가법게 여길 이슬람 혐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종교적 혐오를 확실히 금지하는 국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OIC는 “회의는 비열한 행위에 대한 이슬람권 국가들의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쿠란 모독에 따른 단결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OIC는 쿠란 소각과 관련해 상호 존중·조화를 훼손하고 관용·절제·극단주의 거부 등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국가인 이란은 스웨덴 주재 자국 대사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는 지난달 30일 쿠란 소각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쿠란을 소각한 사람이 수년 전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라크인 살만 모미카(37)로 알려졌다.

스웨덴 당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시위를 허락했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8년 집권’ 훈센 총리, 임기연장 유세 돌입

23일 총선...반대세력 촛불당 배제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임기 연장을 위해 총선 유세에 돌입했다.

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을 이끌고 있는 훈센 총리는 이를 전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훈센은 전날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과 주권 수호를 위해 집권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캄보디아는 오는 23일 총선을 치르는데 CPP를 비롯해 캄보디아청년당, 크메르통합민족당 등 총 18개 정당이 선거에 나선다. 각 정당은 선거 이틀 전인 21일까지 유세를 벌이게 된다.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971만645명이며, 이중 여성이 516만 1906명으로 과반이다. 투표소는 2만3789곳에 달한다.

훈센 반대 세력인 촛불당(CP)은 이번 총선 참여 자격이 박탈됐다. CP는 지난 2017년 11월에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당시 훈센 정권은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를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했다.

CPP는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몽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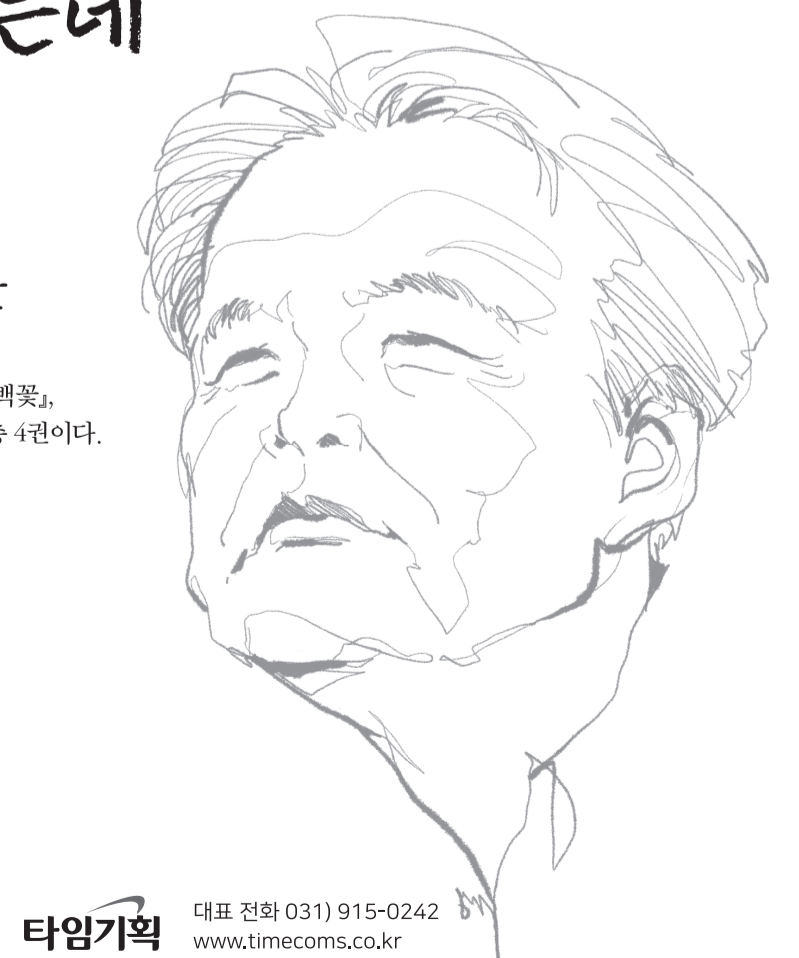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몽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